



주간통일정세 2010-13(2010.03.22~03.2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1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김정일, 中접경 평북서 현지지도(3/2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과 접경해 있는 평안북도의 천마 전기기계공장과 대흥산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들 기계공장을 둘러본 뒤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
 -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경희(경공업부)·장성택(행정부) 노동당 부장, 리재일(선전선동부) 당 제1부부장이 수행함.

- 北김정일,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3/28,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김영일 국제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외무성 강석주 제1부상 등이 수행
 - 김영일, 김양건, 강석주 등 ‘방중수행 유력자’ 배석 주목

[최고인민회의의 관련사항]

◆ 핵심논의

핵심주제: 민생경제, 외자유치

기타주제: 1)김정은 후계구도(국방위·내각 등 인사개편 등)

2)후속 경제대책(외자유치 후속조치 등)

3)朴부장은 회의 참석여부

◆ 핵심논의의 배경

1)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
→ 이와 관련된 예산 배정과 법령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 존재

2) 외자 유치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음.
→ 올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립하고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라선시를 ‘특별시’로 제정하였음.

3) 북, 최근 후계구축 움직임
→ 북한, 김정은 후계구축 과정을 내부적으로 차근히 진행해옴.
→ 김정은, 국방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중요 정책수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관측됨.
노동당 조직지도부도 김정은의 재가를 받아 신진 간부들을 기용해온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지난 1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항일투사’ 김일¹⁾ 출생 100주년 보고회를 통해 후계문제 간접적 시사
조선중앙방송,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백두산이 낳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혁명 수위에 모신 건 행운”
“그이를 자자손손(子子孫孫) 충실하게 모시는데 조선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김일성 생전 발언 소개

◆ 최고인민회의 주제에 대한 북한전문가 전망

- 경제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질 것
- 현 북한 상황(아자사 발생, 민심악화)을 고려하여 본래 이루어지는 예산 관련 회의보다는 식량과 원료등을 채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외자유치 방안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관계나 대미관계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쉽게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화폐개혁 실패로 인해 처형설이 나오고 있는 박부장(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의 최고인민회의 명단등재 주목
- 박부장의 총살설로 인해 나빠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각 경제관료들의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 지남.

◆ 후계구축에 관한 북한전문가 전망

-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다면 국방위원직을 맡는 형태가 될 것
-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에게 국방위원회 직위를 줄 가능성이 있음
- 화폐개혁 실패의 뒷수습을 맡긴 뒤 이것을 업적화 할 가능성
- 지금까지의 후계 구축 작업이 풍선 띄우기였다면 이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뿌리를 내리게 할 필요가 있음.
- 지금 북한 상황에서 후계 문제를 부각하면 ‘김정일 건강이 정말 안 좋은가 보다’하는 혼란만 가중될 것
-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국방위원까지 허용하진 않을 것
- 김정일은 김정은이 당무부터 완벽히 익히기를 원하며, 후계구축 작업은 당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 ‘김일 100주년 보고회’를 통한 후계문제 시사에 대한 분석

- 북한이 ‘자자손손’을 부각시킨 대목을 통해 김 위원장이 정은으로의 3대 세습문제를 염두하고 있음 시사
- 후계 내정 단계인 김정은이 업적·경험 쌓기 단계에서 정책 관여 단계로 폭을 넓혀 가고 있음.
- 북한이 보고대회에서 후계 문제에 대한 ‘혁명 원로’들의 지지를 언급²⁾한 것도 눈에 띈
-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의 귀감으로 내세운 김일의 정신을 간부들이 본받아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 화폐개혁 이후 권력 내부의 불안요소를 차단하고 안정적 후계구도 구축을 챙기고자 추모행사를 벌인 것으로 분석

1) 항일 빨치산 동료인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고 본명 박덕산을 버릴 정도로 절친해 김정일 후계 구축에도 앞장섰음.(1984년 사망)



■ 김정일동향

- 3/23 김정일, 평양산원에 산골, 고려약재, 의료기구와 설비 등 전달 (3/23, 중방)
- 3/24 김정일,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인민봉사총국 운전기자재공급소 일꾼-종업원 등에게 「감사」전달 (3/24,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들' 현지도도 10년(2000.3) 즈음 지난기간 연 1,900여만 명의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 등 현지답사 선전(3/24, 중통)
- 北언론, 천안함 침몰 사흘째 계속 '침묵'(3/28, 연합뉴스)
- 김정일 방중설...단둥 걸으론 평온(3/28, 연합뉴스)

나. 경제 관련

- 北, 반시장 조치 잇달아 철회...‘폐기밭’ 분배(3/22, 자유북한방송; NHK)
 - 자유북한방송은 함경북도 온성군의 통신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올해 초의 식량난에 대처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폐기밭을 세대별로 조정해 6~7월에 수확할 수 있는 보리, 밀, 감자를 무조건 재배케 함으로써 춘궁기를 넘기라는 지시를 군 인민위원회에 내렸다”고 밝힘.
 - 방송은 “온성군 인민위원회에서는 폐기밭 세금을 전담하는 집금원(세무원)에게 주민들의 폐기밭 면적을 확인하고 그 폐기밭에서 나오는 식량총량을 계산해 세대별로 분양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임.
 - NHK방송은 지난 15일 ‘평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 화폐개혁의 후속조치로 금지했던 외화교환을 최근 다시 허용했다”고 전한바 있음.
- 北쌀값, 이달 중순부터 하락 반전(3/23, NK지식인연대; 자유북한방송)
 - NK지식인연대는 북한 현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해 “최근 시장의 쌀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강연회를 열어 4월부터 국가 식량공급을 정상화한다고 널리 알리고, 외화벌이 기관에 대한 불법 비축식량 단속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전함.
 - 단체는 “회령시의 경우 19일부터 식량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해 kg당 1천200원이던 쌀가격이 21일에는 850원까지 내렸다”고 덧붙임.

2) 양형섭 부위원장 ... “김일 동지는 우리 노세대가 할 일은 ‘장군님(김정일)을 받드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



붙임.

- 자유북한방송역시 함경북도 회령시와 양강도 대흥단군의 자사 통신원 말을 인용, “며칠 전까지 1천200원을 웃돌던 쌀 가격이 회령시에서는 610원, 대흥단군에서는 600원까지 떨어졌다”면서 “최근 외화별이 회사에서 중국 쌀을 조금씩 들여와 시장 쌀값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전함.
- 北, 중국서 식량 수입 올인(3/24, 자유북한방송; 연합뉴스; 좋은벗들)
 - 방송은 북한 당국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수입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외화별이 회사(무역회사)는 군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무조건 문닫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함.
 - 방송은 자사 통신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지난 17일 이같은 지시를 내려 수 많은 외화별이 회사들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쌀을 들여오기 위해 교섭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식량을 수입할 돈은 대주지 않고 과제만 내려 다들 막막해 한다”고 전함.
 - 좋은벗들은 온라인 소식지에 “현재 신의주 세관에는 당장 먹을 쌀이 없으니 남방 과일은 수입하지 말고, 공업제품도 전략물자만 수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전함.
- 北, 라선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해야(3/25, 환구시보; 연합뉴스)
 - 북한 라선(라진·선봉)특별시와 북한 국제개발은행의 외자도입 창구 역할을 맡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은 최근 라선시를 북한 국가개발의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육지와 바다를 잇는 물류중심지로 개발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환구시보가 보도
 - 김수열 라선시장은 라선이 특별시로 승격됐을때 김정일 위원장이 라선을 국가 개발 중심지로 건설하라고 명확한 지시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박철수 대풍그룹 총재는 전함.
 - 박 총재는 김수열 시장이 이 지시에 따라 경제건설에 과감히 행동에 나설 것이지만 아직 경제개발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밝힘을 전함.
- 中 단둥, 압록강 수상 버스 운항(3/28, 요녕일보; 연합뉴스)
 -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단둥(丹東)시가 오는 10월부터 압록강 수상 버스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요녕일보(遼寧日報)가 28일 보도
 - 이 수상 버스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다리인 ‘중조우의(中朝友誼)교’ 상류에 있는 압록강 2호 부두에서 하류의 단둥 신도시에 건설 중인 3호 부두까지 17km를 매일 8차례 운항



- “조국 있어야”…北, 조총련에 도움 요청(3/28, NK지식인연대; 연합뉴스)
 - 화폐개혁 후유증 등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재일교포들에게 ‘조국을 도와달라’며 지원을 요청
 - 28일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로부터 ‘총련 일꾼들은 장군님의 대고조 사상을 높이 받들고 총련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
 -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처음 현지지도한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 현장에 대한 물자 지원, 평양시에 식당과 음식 매대를 설치해 운영해 줄 것 등을 예로 들음.

■ 기타 (대내 경제)

- 北 애국복합미생물센터, 항산화음료 ‘이슬’, 복합젓산음료 등 미생물을 이용한 음료제품 개발에서 성과 이룩(3/24, 중통)
- 北, 최근연간 ‘광명성 2호’ 제작 등 세계적 높이에 올라선 과학기술성 과가 수많이 달성되었다고 선전(3/24, 중통)

다. 군사 관련

- 北총참모부 급변사태 바라는 것은 망상(3/26, 조선중앙통신)
 - 최근 한·미·중 3개국가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군 총참모부는 “급변사태를 바라는 것은 미치광이의 얼빠진 망상”이라고 전함.
 - 또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대변인은 “언제나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의 핵억제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모든 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격동 상태에 둘 것”이라고 전함.

라. 사회·문화 관련

- 탈북자 ‘송희’가 전한 北10대들의 삶(3/22, 더 타임스; 연합뉴스)
 -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북한에서 탈출한 지 한 달이 채 안되는 16세 ‘송희’와 22일 중국에서 만나 인터뷰함.
 - 송희는 북한 상황에 대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을 전함.
 - 그 외에 북한에서 현재 “타이타닉 해적판 DVD가 유행”하고 있고, “아주 친한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전함.



- 北언론, 새 학기 전에 종이생산 늘려야(3/23, 민주조선; 평양방송)
 - 23일 입수된 민주조선 최근호(3.13)에서는 ‘새 학년도 준비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아,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새 학기 전까지 준비를 완전히 끝내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각 지방의 자재와 원료를 최대한 활용해 교구품과 학용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특히 종이공장 생산을 결정적(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

- 北, 식량, 물자 부족에 강력범죄 기승(3/24, 좋은벗들)
 - 소식지는 “한 끼니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각박해지면서 최근 강도, 살인 사건이 북한 전역에서 빈발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함.
 - 지난 4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둔기에 맞아 머리를 사망하고 자전거를 빼앗겼으며, 26일에는 사진 필름과 인화지를 판매하던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미화 3천달러 상당의 물품을 강탈당했다고 보도
 - 소식지는 “강력범죄가 급증하자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오후 7시 이후 불필요하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일종의 ‘통금령’이 떨어졌다”면서 “청진시에서는 순찰조를 늘렸지만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다른 사건이 터져 아예 손을 못대는 경우도 많다”고 소개함.

- 북한 결혼식은 어떻게?...평양선 야외촬영도 잦아(3/25, 조선신보)
 - 조선신보의 자매지인 월간 조국 4월호는 ‘평양에서 안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의 한 커플이 결혼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 날의 야외 기념촬영은 빼놓을 수 없는 행사’라고 전함.
 - 잡지는 평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촬영장소로 만수대예술극장 앞 분수대를 꼽음
 - 2001년 탈북한 김영순(74.여)씨는 “북한에서 결혼식 야외촬영은 1980년대부터 하기 시작해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퍼졌다”면서 “하지만 보통 평양에서 많이 하고 농촌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말함.

- 北, 안중근 의거는 민족의 항거의 선언(3/2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역사학학회는 25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이날 ‘안중근 열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한 정의의 애국적 거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 방송은 발표에서 “일제가 안중근의 거사를 범죄시하고 그에게 극형을 선고한 것은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부정의가 정의를 타매하는 횡포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지난날 저지른 용납못할 죄행을 잊지 않고 있으며 기어이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보도



- LAT, 北 화폐개혁 후 주민정서 소개(3/26,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 LAT는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 실패 후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정서를 집중 조명함.
 - 탈북여성 리미희씨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숨김없이 말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하고서 목소리를 낮춰 “내 아들은 뭔가 일어날 것만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굶어죽었던 1990년대와는 다르다”고 말함.
 - 또다른 탈북여성 수정씨는 “김정일위원장이 훌륭한 지도자였다면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누더기차림의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시장에 음식이 동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김위원장)의 좋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마. 6자회담(북핵)동향

■ 기타 (6자회담(북핵))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3/22, 연합뉴스)
- 윌리엄 린 미국 국방부 부장관…“미 본토의 미사일방어는 북한, 이란 등에 초점을 계속 맞춰야 한다”(3/23, 연합뉴스)

2. 대외정세

- 北 억류 미국인은 곱즈씨…재판회부(3/2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통신은 지난 1월 억류한 미국인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31세의 아이잘론 말리 곱즈씨로, 북한 당국은 그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이날 “조선의 해당기관에서는 불법입국한 미국 공민 아이잘론 말리 곱즈(남자, 1979년 6월19일생,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거주)에 대한 범죄자료들이 확정된데 따라 재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함.
- 北, ‘납치문제-비핵화 연계’ 日 비난(3/25, 민주조선;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가 최근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납치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민주조선이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을 파괴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
 - 또한 민주조선은 논평에서 납치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아무런 관련



이 없으며 두 문제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 두 문제를 연계시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

● 中 대북통이 밝힌 ‘북한의 인식’(3/27, 연합뉴스)

- 중국내 대북통으로 꼽히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부장이 26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북한의 현상황을 상세히 설명
- 왕부장은 자신의 방북 경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 내용 등을 일정부분 공개, “북한의 정치는 안정적이며, 불안정한 요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소개한 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망이 높고, 지금도 열심히 현지지도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전해진 대변인이 전함.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전달자 역할을 요청

● 北김영남, 아프리카 3개국 순방(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7일 가봉과 감비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고 보도
-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봉, 감비아, 세네갈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해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음.

■ 기타 (대외 일반)

- 이탈리아 외무성 대표단(「아델리오 마시모 야누치」 아시아 및 오세안주 담당 총국장), 평양 도착(3/22, 중통)
- 北역류 미국인 곰즈씨 서울서 영어교사생활 확인됨(3/24, 연합뉴스)
- 인도 정부문화 대표단(단장: 「자와르 씨르카르」 문화성 비서), 3.23 평양 도착(3/23, 중방)
- 김영남, 3/17 그리스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3/24, 중통)
- 양형섭, 3/24 만수대의사당에서 訪北 이탈리아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3/24, 중통)
- 최태복·박익춘, 3/23 만수대의사당에서 ‘류홍재’ 駐北 中 신임대사와 담화(3/24, 중통)
- 北 고려항공…항공안전위원회(ASC)회의를 통해 EU운항제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3/25, 연합뉴스)
- 北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제 122차 국제회의연맹(IPU)총회 참석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3/25, 조통)
-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3/26, 연합뉴스)
- 로런스 캐논 캐나다 외무장관, “G8 외무장관 회의서 북한 문제 다를 것”(3/27, 연합뉴스)



3. 대남정세

- 北침묵...과거 교전때 즉각 ‘남측 도발’
 - 26일 오후 9시45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것에 대해 북한은 19시간이 지난 27일 오후 5시까지 침묵을 지킴.
 - 북한은 과거 서해상에서 벌어진 세 차례 교전 당시 ‘최장 5시간35분’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
 -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 차례 교전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이 즉시 알려진데 반해 이번에는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즉, 선체에 구멍이 생긴 이유가 즉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 (서해 초계함 침몰 사태와 관계없이 남북간 육로 통행과 개성공단 운영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사항]

◆ 사건발단

북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겠다고 통보,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해당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함.

◆ 사건일지

• 3월 22일

- 북한 - 금강산 관광지구 내 관광과 숙박 등의 사업을 하는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등에게 통지문을 보내 25일 오전 11시까지 금강산 관광지구로 들어와 조사에 응하라고 함.
- 한국관광공사: 24일 방북 결정, 현대아산: 25일 방북하기로 계획

• 3월 23일

- 현대아산 - 실무자 4명과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업체인 에머슨퍼시픽, 일연인베스트먼트 등 31개사 직원 44명, 관광공사 직원 4명으로 방북 인원 확정
- 통일부 - ‘북측의 요구에 따라 세입업체들은 빼고 부동산 소유자들만 방북했으면 좋겠다’고 권고
-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 등 금강산관광 사업체 인원 19명이 조사에 응하기로 확정

• 3월 24일

- 한국관광공사 차동영 금강산지사장 등 직원 3명이 자산 점검을 위해 현대아산 관계자들보다 하루 먼저 방북
- 차지사장 출발전 인터뷰...“금강산에서의 일정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현재 심정은 답답”라고 언급, “하루속히 남북당국 간에



대화가 재개돼서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전함.

• 3월 25일

- 김한수 현대아산 홍보부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 4명과 안교식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회장 등 투자업체 관계자 12명 오전 9시 40분경 북으로 출발
- 김부장 출발전 인터뷰…“북한에 가 봐야지 조사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녀와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하겠다”
- 이들은 같은 날 3시30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올 예정

• 3월 27~28일

- 북한은 예정대로 대표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 소유의 건물과 시설을 조사
- 현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던 3개 업체 관계자 7명도 27일 오전 8시10분께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 조사에 입회
- ‘천안함 침몰 사고’로 남한 정국이 어수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나흘째(28일) 예정대로 진행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6자예비회담 中제안에 동의” <요미우리>(3/21)

- 미국이 6자 본회담에 앞서 예비회담을 개최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방침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음. 신문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예비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생각이고, 예비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 양자회담 개최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앞서 중국은 2월 이후 외교 루트 등을 통해 미국에 예비회담을 개최하자고 타진했지만 미국 측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조약 체결이나 제재 완화 등의 논의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하며 북한의 6자회담 선 복귀를 요구해 평행선을 달려왔음.
- 중국이 “예비회담도 실질적으로는 본회담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해 미국 측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예비회담에서 북·미 양자 대화를 할 경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6자회담 틀 밖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설명할 수 있음.
-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동의함으로써 북한에 예비회담 참가를 촉구하고, 향후 예비회담에서는 “제재 완화 논의를 본회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설득해 6자회담을 정착시킨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음.
- 앞서 중국은 ‘북·미 대화→6자 예비회담→6자 본 회담’의 3단계로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중 북·미 대화와 6자 예비회담을 섞은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6자 본회담을 개최하는 2단계 안에 미국이 동의한 셈이 됨.

● 주영 북한대사, ‘6자회담 6월 중순 전 재개’ 시사(3/19)

-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유럽연합 주재 대표부 대사 겸임)가 ‘오는 6월 중순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크리스티안 옐러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의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자 대사는 18일(현지 시간) 브뤼셀을 방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초청으로 2시간 가량 대표단 회의에 참석했음.
- 옐러 의장은 VOA와 전화인터뷰에서 “자성남 대사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평양 방문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 이라면서,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전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은 2004년 9월 설립 이후 정례적으로 남북한을 방문해왔으며, 올해에도 6월 4~12일 북한과 남한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임.

- 엘러 의장은 이어 “자 대사는 EU(유럽연합)의 대북 투자를 요청하면서, 북한 정부의 예산지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북한 정부가 과거에는 국방비에 많은 지출을 해왔지만 현재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경제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음. 엘러 의장은 또 “자 대사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특히 시행 초기에 일부 실패한 점이 있었는데 이는 일부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화폐개혁 실패의 이유로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거론한 자 대사의 발언은 최근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전 노동당 재정계획부장 박남기를 총살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자성남 대사는 한반도관계 대표단 회의가 끝난 뒤 연합뉴스 특파원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화폐개혁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 수습됐다”면서 “화폐개혁은 인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으로 시행된 조치로서 초기의 혼란이 안정돼 잘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중국의 역할(3/19)

-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논의로 이어지도록 함께 힘쓰기로 했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외교부장은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漁臺)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이 밝혔음. 유 장관은 중국이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대응과정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양국 장관들이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등, 공통으로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음.
- 북한은 지난해 5월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결의하자 곧바로 “6자회담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음. 이후 김 위원장은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북 때 “다자회담도 가능하다”고 했고 올 들어 1월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때 다시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유관 당사국들의 성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동북 3성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전략 요충지로 지목해 중국이 그간 개방을 요청해온 라진항에 대해 북한 당국이 더욱 주도적으로 움직여 외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상황임. 이번엔 김 위원장이 방중하면 먼저 동북 3성을 찾고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지도부와 회



● <한·중 외교회담..6자재개 전망은>(3.18)

- 중국의 중재 속에 속도를 내는 듯하던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정체'된 듯한 국면을 보이고 있음.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8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가 최근 기류를 잘 보여줬음. 양국 외교장관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 기조만 확인한 것임. 물론 이번 회담이 6자회담 재개와 직결되는 성격은 아니지만 회담재개의 속도와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로 기대돼왔음.
- 회담재개 조건을 놓고 대치중인 북·미 사이에서 적극적 조율을 시도 중인 중국의 중재가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고 있는 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중국은 북·중간 고위급 교차방문을 거친 뒤 이달 초부터 6자회담 각 당사국에 '유연성'을 주문하며 중재역을 모색해왔음.
-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면 이를 토대로 북·미 추가대화→6자회담 예비회담으로 수순을 밟는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제조건을 내걸며 '긍정적 신호'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현재로는 6자회담이 언제 열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는 언제라도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이 결심해서 입장을 정하는데 달렸다"고 강조했다.
- 한·중이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문제를 '로키(low-key)'로 다룬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5자가 지나치게 회담 조기재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마치 6자회담 복귀 자체가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임. 정부 고위당국자는 "회담 재개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렇게 볼 때 앞으로 6자회담 재개 흐름은 당분간 '요란하지 않은'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모색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하지만 북핵 협상의 가변적 성격상 변수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 한·중 "각국 외교노력 6자재개 이어져야"(3/18)

- 한·중 외교장관은 18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회담 재개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논의로 이어지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음.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날 낮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이 전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 적극적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보



다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 장관은 앞으로의 6자회담 재개 노력과정에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음. 양국은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북핵 담당 실무당국자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중국측이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6자회담 조기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측이 북한을 상대로 한 설득노력에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결과로 풀이됨.
- 두 장관은 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양국간 정상 및 고위급 인사교류를 적극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특히 오는 5월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상호 지지 입장을 확인했음.
- 두 장관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논의와 올해 11월 G20(주요 20개국)과 관련한 상호 협력, 한·중·일 3국간 협력 등 양국간 협력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날 회동은 당초 예정된 시각을 30분가량 넘긴 2시간 30여분 간 격의 없고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외교당국자들은 전했다. 유 장관의 이번 방중은 2008년 취임 이후 7번째이며 양 부장과는 13번째 회담을 가진 것으로 기록됐음.
- 양 부장은 회담 시작에 앞서 “Hello, my old friend(안녕, 나의 오랜 친구)”라며 유 장관을 환영했으며 유 장관도 양 부장을 “my close friend(나의 가까운 친구)”라며 친근감을 표했음. 두 장관은 회담장소인 조어대 12호각 앞에 심어진 ‘김일성 식수’(김 주석이 1959년 10월 2일 조선당정대표단장 자격으로 심은 것으로 알려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회담에 착수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 최악 상황 대비해야” <WSJ>(3/27)

- 대북전문가인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향후 10년내 북한이 파괴적 방식으로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경우에 대비해 전 세계가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초계함 ‘천안호’가 26일 북한과의 해상 경계선 부근에서 침몰한 사건은 아직 북한의 개입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남북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미국에 대해 “북한이 핵 영광(glory)의 섬광 속으로 나아가길 결정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전 인민의 가미카제화라는 구호를 현실화시킨다면 엄청난 수의 사상자 속에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미군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그는 북한에 경제적 문제는 단지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의 포스터가 나온 것이 1990년대 극심한 기아 와중이었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 위기가 경제보다는 이념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고 강조한다고 덧붙였음.

- 마이어스 교수는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 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또 양키 식민지하에서 살고 있는 남쪽의 동포들이 김정일 치하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해방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왜 희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답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은 절망감 속에서 가장 무모한 선전선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일부 서방언론들은 북한이 붕괴 위기에 놓였을 때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회복시키는데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다”면서 “그러나 이는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편협적인 북한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동구권 몰락 이후 북한에서 이념적 색깔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고,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대신 선군 사회주의를 강화해 왔다면서, ‘지도자를 옹위하기 위해 인간 폭탄이 돼야 한다’는 가미카제 용어의 사용이 더 광범위해졌다는 것임.
-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이 향후 10년 이내에 폭력적이고 재앙적인 방식으로 몰락할 경우에 대비해 모든 나라들은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김정일 이후 북한의 주도권을 쥌 가능성에 대해 초조해 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핵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탄도미사일 시스템도 수출” <美보고서>(3/26)

-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개별 장비와 물자,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한데 묶은 ‘완전한 형태의 미사일 시스템’(full missile system)까지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 이런 사실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지난 한해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기술 이전현황을 파악,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음.
- 보고서는 북한을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면서 “북한은 수년간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부품, 물자, 전문 기술, 완전한 미사일 시스템을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지의 국가에 수출해 왔다”고 밝혔다.
- 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사거리와 정교함이 제고된 탄도미사일의 개발, 생산,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미사일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 거래선들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 시리아와 맺은 관계는 튼튼하다”면서 “북한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시리아의 은밀한 핵개발 계획에 도움을



제공했으며, 핵 물질 혹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음.

- 보고서는 이란의 경우, 과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아 탄도미사일의 자체생산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기술했음. 또 보고서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화학무기도 비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생물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 기반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음.
- 이 보고서는 중앙정보국(CIA)의 ‘무기 정보, 비확산, 군축통제 센터’의 초안작성 작업에 이어 국가정보위원회(NIC)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음.

● 美 “北이 원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 고려”(3/24)

- 미국은 23일 북한이 원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기꺼이 고려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음. 하지만 엄격한 모니터링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전날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미국의 직접 대화 및 인도적 지원 제공을 주장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그곳(북한)에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미국의 결정이 아니라 북한에 의한 결정이었다”면서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하지만 그는 “미래에 그런 지원을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이,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가고 군부와 같은 다른 그룹에 전용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엄격한 모니터링이 조건임을 시사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북미대화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과의 활발한 양자대화 전망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우리의 간단한 조건은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이 미래에 발전하려고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북미간) 양자적 과제가 아니며, 국제적, 지역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고 과거의 약속 준수를 시작한다면 양자대화를 위한 공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방한 중인 카터 전 대통령은 전날 고려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가진 강연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1월말 불법입국한 아이잘론 말리 곱즈라는 이름의 미국인을 재판에 회부키로 한 것과 관련,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지금까지 4차례 이 미국인을 간접 면담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북한이 어떤 혐의로 이 미국인을



재판에 회부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 미국방 부장관 “北 ICBM 美본토 위협가능성”(3/23)

- 윌리엄 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2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린 부장관은 미 항공우주학회(AIAA) 주최로 열린 미사일방어 관련 회의에 참석, “북한은 대포동 2호급 ICBM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란은 장거리 ICBM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모두 언젠가 미국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미 본토의 미사일방어는 북한, 이란 등에 초점을 계속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1998년 북한은 첫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했고, 미 본토가 언젠가 불량국가에 의해 목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 린 부장관은 또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더욱 더 정교한 전달체(미사일)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국방전략은 이런 비대칭적 위협에 맞서야만 한다”고 밝혔다.

다. 중·북 관계

● 中 단둥, 압록강 수상 버스 운항(3/28)

-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단둥(丹東)시가 오는 10월부터 압록강 수상 버스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요녕일보(遼寧日報)가 28일 보도했다. 이 수상 버스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다리인 ‘중조우의’(中朝友誼)교 상류에 있는 압록강 2호 부두에서 하류의 단둥 신도시에 건설 중인 3호 부두까지 17km를 매일 8차례 운항하게 됨.
- 운항 시간은 30~40분으로, 이 수상 버스가 도입되면 육로 교통과 함께 단둥 시가지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전망이다. 단둥에는 지금도 신의주를 살펴보는 압록강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지만 중조우의교 부근만 둘러볼 뿐 압록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장거리를 운항하지는 않음. 단둥 신도시는 중조우의교에서 10km 하류 지점에 건설되고 있으며 이미 기반조성 공사가 끝나 일부 건물이 들어서고 있음.
- 중국 정부가 노후한 중조우의교를 대체하기 위해 17억 위안(2천900억 원)을 들여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신 압록강 대교가 세워지는 곳이기도 함. 단둥시는 2호 부두에서 압록강 상류 지점인 후(虎)산성까지 운항하는 수상 버스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후산성에서 단둥 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장거리 수상 버스가 운항하게 됨.
- 후산성은 고구려시대 축조된 성(城)이지만 ‘만리장성 늘리기’에 나선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만리장성의 동단(東端) 기점’이라고 공식 발표,



역사 왜곡 논란이 이는 곳임.

● <정부, ‘김정일 방중 임박설’ 예의주시>(3/25)

- 정부가 25일 급부상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대내외적 정황(情況)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이 전격 방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임.
- 정부는 특히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시 의전·경호 선발대가 움직인 사실에 주목하며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데 신경을 집중하고 있음.
-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히는게 없이 조용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무런 징후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선발대가 움직이고 사흘만에 김 위원장이 방중한 전례가 있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방중에 관한 구체적인 징후는 없지만 계속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일부 외교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사리원 협동농장 현지 지도 이후 열흘 이상 공개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방중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한 소식통은 “일종의 장고(長考)기간을 가진 뒤 방중하려는 수순일 수 있다”고 전망했음.
- 그러나 외교가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방중임박 징후가 드러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의 방중이 당장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음.
- 한 외교소식통은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이 가능한 시기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까지”라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방중을 준비하는 징후가 없다는 점은 이번 시기에 방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일부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장거리 여행이 수반되는 방중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음.

● 北, 중국서 식량 수입 ‘올인’<대북매체>(3/24)

- 북한 당국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수입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외화벌이 회사(무역회사)는 군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무조건 문닫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이 24일 전했다. 이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의 자사 통신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지난 17일 이 같은 지시를 내려 수많은 외화벌이 회사들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쌀을 들여오기 위해 교섭에 뛰어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식량을 수입할 돈은 대주지 않고 과제만 내려 다들 막막해 한다”고 말했다.
- 방송은 이어 “외화벌이 회사들은 돈이 없어 북한산 광물, 해산물, 약



초 등을 쌀이나 밀가루와 바꾸려 한다”면서 “중국 상인들이 헐값에 사고 비싸게 팔려고만 하는데도 북한의 외화벌이 회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방송은 “이렇게 들여 온 옥수수과 밀가루 중 일부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되고 그것을 잘못 먹은 주민들이 구토나 복통을 호소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대책 없이 잘 씻거나 채를 쳐 먹으라는 말만 한다”고 덧붙였다.
- 또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이날 온라인 소식지에서 “현재 신의주 세관에는 당장 먹을 쌀이 없으니 남방 과일은 수입하지 말고, 공업제품도 전략물자만 수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이는 사실상 식량을 가장 우선해서 수입하라는 조치”라고 말했다.
- 한편 북한 식량문제 전문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글로벌 협력연구본부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중 교역동향’에서, 북한이 올해 1월 중국에서 들여온 곡물 수입량은 모두 1만3천 834t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8% 증가했고, 수입금액은 미화 630만달러로 396% 늘었다고 밝혔다.

● 中, 라진항 7월부터 사용..연 150만t수송(3/24)

-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독점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사용할 것으로 보임.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항구(口岸)관리판공실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15일 착수한 훈춘과 북한의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를 잇는 도로 보수 공사가 6월 말 마무리된다”며 “오는 7월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라진항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훈춘의 석탄 10만t을 수송하게 될 것”이라며 “본 궤도에 오르면 연간 150만t을 운송할 수 있어 라진항이 중국 북방 자원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황금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훈춘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가 비포장이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화물 운송에는 큰 문제가 없어 훈춘-원정리 도로 보수만 끝나면 라진항을 통한 남방으로의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며 “7월부터 사용키로 북한 당국의 승인을 얻었으며 중국 중앙정부도 곧 허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중국 창리그룹은 2008년 라진항 1호 부두 독점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이미 지난해 3천만 위안(5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50만t의 하역 능력을 갖춘 라진항 1호 부두 1기 정박지 보수공사를 마쳤다. 창리는 화물 수송량이 늘어나는 추이를 살피 조만간 2기와 3기 정박지 보수공사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중국의 라진항 화물 운송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라진항 개방에 따라 철도를 이용한 육로에 의존했던 중국 북방의 지하자원 및 곡물 운송 통로가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해상



- 운송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당장 매장량 규모가 1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훈춘의 석탄 자원이 라진항을 통해 ‘창장(長江)삼각주’로 운송될 수 있게 됐으며 점차 헤이룽장(黑龍江)과 지린(吉林), 내이명구(內蒙古) 등 북방지역의 지하자원과 곡물도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이들 북방 3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지하자원 보고이자 곡물 생산기지이지만 비싼 물류비용 때문에 남방으로 운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음.
- 더 나아가 북방지역의 지하자원과 곡물의 해외 수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중국 국무원이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하려는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도 라진항 사용에 따라 한층 탄력을 받게 됐음.
- 엔벤자치주의 한 조선족 기업가는 “1995년부터 10년간 엔벤의 한 기업이 라진항을 통해 부산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한 적은 있지만 중국 북방 자원이 라진항을 통해 남방으로 운송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동해 뱃길이 열리면 풍부한 북방 자원의 남방 운송과 해외 수출이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교역 확대에 따라 두만강 유역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 일·북 관계

● 北, ‘납치문제-비핵화 연계’ 日 비난(3/25)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4일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가 최근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납치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을 파괴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음.
- 민주조선은 이날 논평에서 ‘납치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두 문제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 두 문제를 연계시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음. 논평기사는 이어 일본은 국제사회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납치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시게이에 일본대사는 지난 10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6자회담에서 양국 간 여러 현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함께 납치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음.
- ‘납치문제’는 북한 공작원들이 1970년대 말 일본인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간 사건으로 북한은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북한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 당시인 2008년 8월 일본과 협의에서 납치자문제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약속했으나 직후 후쿠다 내각이 퇴진하면서 ‘재조사의 연기’를 통보했었음.

마. 기타

● 北김영남, 아프리카 3개국 순방(3/27)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7일 가봉과 감비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봉, 감비아, 세네갈을 공식친선 방문하기 위해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음.
- 김 상임위원장의 순방에는 최창식 보건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이 수행원으로 동행했음.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를 순방했고 2008년 3월에는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는 등 거의 해마다 아프리카 순방 외교에 나서고 있음.

●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 개탄’ 결의안 채택(3/25)

-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5일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음.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이날 UNHRC 47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음. 이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5개국이었으며 13개국은 기권했음.
- 지난해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은 2표가 늘었고, 반대는 1표가 줄었음. 기권했던 2개국이 올해는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했던 1개국은 기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임.
-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정치범과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노동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결의안은 또 북한이 지난 2004년 유엔 결의안을 통해 임명된 비릿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6년 동안 일절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음.
- 오는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달초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내 인권을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라고 묘사하면서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북한 정권이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 ‘거대한 감옥으로서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결의안에 대해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나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뜰에 박힌 결의안 초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최 참사는 또 “미국과 일본, EU는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인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의 이슬람 사원 첨탑(Minaret) 추가 건설 금지 등을 비롯한 반이슬람 행동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찬성 20표, 반대 17표의 근소한 차이로 채택했음.

● “北역류 미국인, 한국서 영어교사”(3/24)

- 북한 당국이 불법입국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힌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30) 씨는 한국에서 영어교사 생활을 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 고프즈 씨의 친구 마셜렛 와이즈는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프즈는 신앙심이 깊고 성실한 영어 교사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며 “그는 매주 일요일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녔고 이국 생활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교사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와이즈는 한국에 체류하며 영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와이즈는 2008년 한국에 와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고프즈와 만나게 됐으며 “고프즈가 당시 영어를 가르치러 한국에 와 있었고 영어 교사로 일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고프즈 씨가 2008년 4월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3월까지 영어를 가르쳤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이 초등학교의 동료 교사들을 인용해 고프즈 씨가 아주 예의바르고 조용한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아주 훌륭한 교사였으며 교회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전했다.
-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불법 입국한 미국 공민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남자, 1979년 6월19일생)에 대한 범죄 자료들이 확정된 데 따라 재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그러나 고프즈 씨의 구체적인 죄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23일 고프즈 씨의 이름 ‘아이잘론 말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면서 그가 지난해 말 무단 입북했던 로버트 박 씨 경우처럼 종교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입국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 北고려항공, EU 운항제한 완화될 듯(3/15)

- 유럽연합(EU)이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에 대한 역내 취항 금지조치를 일부 완화할 전망이다. 24일 EU 집행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 항공안전위원회(ASC)가 회의를 열어 고려항공을 역내 취항규제 항공사 리스트의 ‘부칙(ANNEX) A’ 등급에서 ‘부칙 B’ 등급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음. 블랙리스트의 부칙 A 등급 항공사는 EU 역내 취항이 전면 금지되지만, 부칙 B 등급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취항이 허용됨.
- ASC는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는 자문기구로 최종 결정은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내려지지만, 여태껏 ASC의 권고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



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고려항공의 등급조정 가능성은 매우 큼. 지난주 ASC 회의에는 고려항공 관계자가 직접 참석, 그동안 안전도 개선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매년 3차례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를 수정 발표하는 집행위는 집행 위원단 회의에서 고려항공 등에 대한 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 이달 말 올해 1차 수정된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임. ASC의 권고안대로 부칙 B 등급으로 분류되면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3월 EU 집행위가 역내 취항규제 항공사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4년 만에 처음으로 부칙 A 등급을 탈피하게 됨.

● 美, 4개년 외교검토 중간보고서 내달 공개(3/22)

-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 미국 외교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이에 필요한 대응책 등을 담은 ‘4개년 외교발전검토’(QDDR) 보고서의 초안을 내달 초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QDDR 중간보고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앤메리 슬로터 국무부 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는 중간보고서가 4월 초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개 전에 의회에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이 20일 전했다.
- 국무부는 QDDR 중간보고서 공개 후 외교 유관 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보고서를 오는 9월 채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QDDR 중간보고서에는 장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외교적 대응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됨.
-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뒤 대북정책 진반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으로 문건을 통해 이를 공개한 적은 없음. 따라서 QDDR 중간보고서에 북한 문제가 언급된다면 사실상 처음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향후 처방전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국방부의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를 벤치마킹해 미국 외교의 장·단기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반영한 QDDR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그간 국무부에서는 외교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돼 왔음.
- 클린턴 장관은 상원의원 재직시절 국방위에서 활동하면서 국방부 QDR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인정, 국무장관에 취임한 뒤 ‘국무부판 QDR’의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주한미군 철수? 美하원서 뜻밖 거론>(3/26)

- 한미 동맹관계에 극히 민감한 이슈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2011회계연도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윌러드 태평양군사령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됐음.
- 한국 국민을 사랑하고 한국인으로부터 태권도도 배웠다고 소개한 테일러 의원은 “나 자신을 포함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1950년대 모습을 담은 ‘매쉬(M.A.S.H. 한국전당시 야전병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받았겠지만, 이제 그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아름답고 현대화된 국가”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그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고, 2만8천명의 미국인(미군)을 집으로 귀국시킬 수 있겠느냐. 어느 시점까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음.
- 이에 샤프 사령관은 “우리의 (한국) 주둔과 예측가능한 미래에 한국과 팀을 이루는 것은 지난 57년간 그랬던 것처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주둔 필요성을 제기했음. 샤프 사령관은 이어 “우리의 2만8천500명의 병력 투자는 큰 투자”라면서 “그들(한국)이 글로벌 문제에 개입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 하지만 우연인지 공화당의 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 코프먼 의원은 “우리 군을 항구적으로 한국에 주둔시키는 대신 한국군과 연례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위) 공약을 보여줄 수는 없느냐”고 물었음. 그는 “오늘과 같은 때에 한국에 2만8천명의 미군을 항구적으로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음.
- 의원들의 뜻밖의 잇단 질문에 샤프 사령관은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필요한 것이며, 정말로 우리에게 거대한 이익을 준다”면서 “(한국) 주둔은 동북아와 같은 세계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또 “북한은 DMZ(비무장지대)에 매우 근접한 곳에 그들의 대다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 (한국에 대한 공격시) 거의 미리 알아챌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한국과 함께 준비를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 그는 짧은 순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거듭 지적하면서 “2만8천500명의 숫자는 큰 투자이며, 지난 57년간 한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또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에



체결될 순2009 공동비전'에 그려진 글로벌 전략동맹국이 빠르게 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 이날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큰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 상임위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됨.

● 샤프 "2012년초 전작권 전환 최종연습"(3/26)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5일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된 2012년 초 한미간에 최종적인 인증(certification)훈련을 할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의 예정된 추진을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군사적으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준비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후 작전 구조와 조직에 대한 많은 테스트를 했다"고 말했다.
- 그는 "이런 전략적전환계획(STP)과 향후 UFG 훈련 및 마지막 인증훈련을 통해 한국이 2012년 4월 전작권을 가져가는데 확실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군을 강화시키며, 북한에는 한국군의 강함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전날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올해와 내년 UFG 훈련에서 두 차례 더 (전작권 전환후 상황)을 연습하고, 2012년 초 실시될 인증훈련에서 최종 계획을 연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샤프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시기와 관련, "향후 5~6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 2016년까지는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곳으로의 이전은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평택기지 확장 공사가) 끝나기 이전에도 많은 인력이 그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확실히 갖기 위해 우리의 계획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이날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가능성 또는 그 전달시스템(미사일)의 확산 가능성은 북한이 앞으로 계속 확산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음.
- 그는 전날 하원 세출위 소위에서 "우리는 북한의 해상과 항공을 통한 불법 무기수출에 대처해야만 했으며, 확산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다른 움직임이나 관심 선박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의 확산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들은 지난해 노력을 증대시켰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 美태평양사령관 “한국, MD능력 확보”(3/25)

-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24일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문제와 관련, “한국은 이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 윌러드 사령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출석 뒤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MD체제 참여와 관련된 질문에 “이를 확대하는 결정은 확실히 한국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결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미사일방어와 관련된 어떤 더 큰 전략적 시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탄도미사일방어(BMD)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으며, 미사일방어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와 수준을 놓고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북한이 올해 초 유엔사와의 실무급 접촉에서 미군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새로운 상황 진전은 없다”면서 “정부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는 태평양사령부가 주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5가지 사안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도발 저지와 핵 프로그램 개발,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위협으로 제시했다.
- 그는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확산 위협도 다루고 있다”면서 선박, 항공기를 통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에 대처해야만 했고, 계속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와 관련,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계속 재래식 무기와 다른 물질들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전과 번영에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권부 엘리트들이 기득권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샤프 “北 불안정 사태 염두에 뒤야”(3/25)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북한 내 불안정(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뒤야 한다”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처참한 중앙집중식 경제와 황폐한 산업, 불충분한 농업 기반, 영양부족의 군과 주민 및 핵프로그램 개발, 갑작스러운 지도부 교체 가능성이 (북한에서) 불안정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샤프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투에서부터 여러가지 한반도 불안정 가능성, 인도적 지원 작전 및 심지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김정일의 전략적 목표는 생존과 정권 유지”라면서 “핵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추구하는 것도 정권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 샤프 사령관은 이어 북한 내 현 상황과 관련, “김정일이 완전한 통제를 여전히 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김정일은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조직적으로 소개해 왔다”고 말했다. 또 “북한 군부의 의사결정 역할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며, 재래식, 비대칭 군사력은 여전히 김정일의 권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북한이 다단계 우주발사체 확보를 시도하면서 미사일 군사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은 재래식, 비대칭 군사력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지역과 세계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 시도가 가장 우선되는 우려사안”이라면서 “이런 능력들은 완전히 개발되면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샤프 사령관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전력의 감소나 미국의 한반도 안보 의지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 양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군의 홀로서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 그는 또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에 대해 “전략적 (작전권) 전환계획(STP)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17일의 원만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모든 조건을 맞추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 그는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총체적인 군사역량을 바탕으로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위해 지금과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폭격,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한 총체적 군사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JCS)가 작전권을 리드하게 되며, 새로 창설될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가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파이로 프로세싱’ 논쟁>(3/24)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 공법)을 놓고 정부 안팎에서 물밑 논쟁이 뜨거움. ‘평화적 재활용’을 앞세워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는 관계부처와 원자력 학계 쪽에 중요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해온 이 공법을 둘러싸고 한동안 잠잠했던 타당성 논란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 올 1월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당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의 타당성 공동조사를 검토기로 한 것이 그 계기가 됐음.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정치권, 원자력학계를 중심으로 시각차가 표출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음. 논쟁은 크게 ▲핵확산 저항성과 ▲경제적 타당성의 두 갈래로 압축됨.
- 우선 핵확산 저항성 논란은 한국과 미국내 비확산론자들의 시각차에 기반하고 있음.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확산 위험물질인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지 않은 채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가공해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공법으로 원자력학계에서는 ‘꿈의 기술’로 불림.
-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학자들은 “핵확산 우려가 가장 낮은 기술”이라며 ‘재처리가’ 아닌 ‘평화적 재활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원자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파이로 공법의 핵확산 저항 가능성이 낮다는데는 국제 학계에서 큰 틀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미국내 비확산론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기존 습식(濕式) 재처리 기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관점으로 투영되고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 원자력분야의 한 소식통은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핵권위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핵확산 저항성 측면에서 파이로 공법과 기존 습식 재처리 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며 “미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확보하는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음.
- 한 외교소식통은 “기술적 차원의 핵확산 저항성이 정책적 결정의 판단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음. 보다 큰 논점은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국내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원자력학계 일각에서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핵 재처리권을 확보할 경우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원자력 발전연료용 농축우라늄 수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의 포화상태를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재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방향”이라며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도입할 경우 전체적인 재처리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음.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이 198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걸쳐 200억 달러를 들여서 재처리 시설을 완공했다”며 “올해부터 20억 달러를 들여 재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1억 달러 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비용 대 편익효과를 따져봤을 때 밀저도 한참 밀지는 장사”라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사용후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재처리된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더해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인 파이로 프로세싱의 상용화 시기에 대한 논란도 있음. 파이로 프로세싱은 아직 미완성 기술로서 최종 실용화가 되려면 20년 이상은 더 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한 당국자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핵주권론을 내세워 파이로 프로세싱을 적극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2030년이나 돼야 써 먹을 수 있을까 말까한 기술을 갖고 당장 2014년 개정하는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음.
- 이 같은 논쟁은 오는 5~6월 이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됨. 한 외교소식통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원자력 개정협상의 전부를 차지하는 이슈는 아니지만 협상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부산경찰, 투자사기 美외교관 지명수배(3/23)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0대 한국인 여성에게 투자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A(50)씨가 해외로 도주한 사건과 관련, 국제경찰인 인터폴과 공조수사하면서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음.
-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A씨가 입국할 경우 통보하도록 조치했으며 필리핀에 A씨의 소재파악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고 있음. A씨는 미국 정부에서 4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이틀 전인 지난 3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이씨는 “A씨에게 사기당한 돈은 딸과 함께 생활해야 할 돈으로 정말 포기할 수 없다”면서 “A씨가 미국 외교관 신분이었던 만큼 미국 정부에서 책임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음. 미국 측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자진출석하도록 권유하거나 한국으로 직접 데리고 오겠다”는 입장임.

● 조현 “美개입, 동북아 안보유지에 중요”(3/23)

-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3일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조정관은 이날 발간된 ‘글로벌아시아’ 봄호에서 ‘복잡한 유산: 동북아시아 교량 구축’이라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개입이 동북아 지역의 효과적인 안보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구축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격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국익의 일치점을 찾고 상호 협력을 심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아시아재단이 발간하는 계간 영문저널인 글로벌아시아는 이번호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 전·현직 정부 관료 및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 가능성을 모색했음.
- 수전 셔크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동아시아 다자관계 구축에 대한 워싱턴의 소극적 반응은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다자관계 구축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다자주의가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왕위조우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세계무대에서 더욱 공격적인 역할을 추구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체제를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중국의 안보체제 구상에서 국내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음.
- 다나카 히토시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및 역내 주요 국가들 간 대화 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카네기 보스크바 센터 소장은 동아시아 안보체제에 대한 논의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지적하고 “분쟁과 협력의 잠재력으로 미뤄 봤을 때 대륙 아시아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 글로벌아시아는 아울러 동아시아 다자 안보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함께 소개했음.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 간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여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적 회의기구가 확산돼 왔지만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효과적인 기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 내 신생 안보체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나. 한·중 관계

● <주중문화원 3주년 기념행사 열려>(3/25)

- 주중 한국문화원(원장 김익겸)은 확장 개원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5일 오후 베이징 광화루(光華路) 문화원 청사에서 전통 공연과 전시 등으로 이뤄진 대규모 기념행사를 마련했음.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예술관현악단이 가야금 삼중주와 피리, 해금 연주를 들려줘 큰 박수를 받았음.
- 류우익 주중대사는 환영사에서 “한·중 양국은 풍부한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의 범위를 문화사업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양국민간 우의 증진의 가교 역할을 해 온 주중문화원이 앞으로도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3주년을 기념해 문화원에서는 ‘한복 그 선과 색의 어울림’을 주제로 ‘이리자 베이징 특별전’이 27일까지 열리며 ‘100마리 호랑이의 베이징 나들이’를 주제로 서공임 민화 초대전도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또 집합의 시야를 주제로 19일부터 시작된 국제당대청년예술연합전도 31일까지 계속됨. 또 27일에는 베이징 소재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0 베이징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열림.
- 2007년 3월 22일 현재의 장소에 확장 개원한 문화원은 연간 방문객이 6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베이징시의 중요한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양국간 교류 촉진을 위해 각종 전시회와 초청영화제, 작가와의 만남 등 각종 전시와 행사를 수시로 열고 있음.
- 이날 행사에는 류우익 대사를 비롯해 쑤허바트얼 주중 몽골대사 등 주중 외교사절과 국가신문출판총서 옌샤오홍(閻曉宏) 부서장과 국가종교사무국 장젠용(蔣堅永) 부국장 등 중국 측 주요인사, 김익겸 문화원장, 한인회, 기업관계자, 일반관람객 등이 대거 참석했음.

● 정몽준, 방중차 출국..리커창 면담(3/25)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25~28일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로 방문하기 위해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함. 지난해 9월 취임한 정 대표가 당 대표 자격으로 해외 출장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임. 정 대표는 26일 낮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오찬을 함께 하고, 오후에는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를 만나 한·중 관계 심화·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중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비롯한 북핵문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정 대표는 이에 앞서 베이징대학에서 ‘동북아정세 및 한·중관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특강함. 이어 정 대표는 27일 상하이로 이동하며, 28일 ‘2010 상하이 세계박람회(EXPO)’ 현장을 시찰함.
- 정 대표는 또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각각 기업 및 교민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함. 정 대표의 이번 방중에는 부인 김영명 여사와 김기현 이혜훈 장운석 권택기 김광림 백성운 정양석 조해진 의원 등이 동행함.

● 류우익-중국방부장, 국방협력 강화 다짐(3/25)

- 한국과 중국이 국방 및 군사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음. 통신은 량광례(梁光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류우의 주중 한국대사와 24일 면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음.

- 류 대사는 “최근 몇년간 한·중 양국은 각 분야의에서 협력관계가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면서 “우리는 양국이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양국 및 양군(兩軍)간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류 대사는 주중대사로서 이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음. 량 부장도 “양국 및 양군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및 양군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그는 “양군 사이의 우호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돼 각 계층별 분야별로 상호방문과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음. 량 부장은 이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류 대사에게 설명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 일제하 강제동원 근로자 피해 구제 길 열린다(3/26)

- 일제 때 강제 동원되기도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한인 노무자들이 정부 지원금 형태로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 일본 외무성은 26일 오전 주일본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제하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서 부분 17만 5천명분 (총 공탁금액 2억7천800만엔)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밝혔음.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이날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 기록을 일괄 인수, 전산화와 함께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하기로 함.
-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민간인 공탁금 기록을 넘겨받은 것은 전후 처음임.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에서 일본 법무성이 보관해 온 기록의 사본을 건네받았다”며 “이번 공탁서 부분 접수를 계기로 노무동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판정과 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가 이날 제공한 공탁서 부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 미수금을 일본 기업이 해당 지역별로 공탁한 기록의 사본으로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임.
- 부분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등이 노무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급여, 수당, 부조금 등 미불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음.
- 위원회는 공탁금 자료를 검증, 분석, 보완해 전산화하는 데 최소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임. 위원회 관계자는 “공탁금 자료 인수로



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해 피해 사실을 확인받지 못했던 대다수 노동동원자들의 피해 실태, 미불임금 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사실 미처리 건 10만여건, 미수금 지급 관련 4천여 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또 근거 자료가 없어 피해 신고·접수를 포기했던 이들 다수가 이번 일을 계기로 신고·접수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재신고·재접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위원회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총 200만명의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로부터 추가로 공탁금 관련 자료를 넘겨받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 그러나 일본측은 이날 제공한 공탁서 부분이 한인 노무자 관련 공탁금 기록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위원회 측은 2007년에 군인, 군속 등 약 11만 건의 미지급 임금 관련 명단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음.
- 우리 정부는 2005년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을 결정한 이후 피해판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공을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 日외상 “한일 역사 공동연구 의미 있다”(3/23)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23일 한국과 일본의 역사 공동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카다 외상은 이날 공개된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 최종보고서와 관련,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인식의 차가 메워질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 그는 “역사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어 국가간 뿐 아니라 개인간에도 역사관이 달라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현대사 부문에서는 꽤 심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 시대에서는 공통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한일역사공동위 ‘합의’해도 구속력은 없어>(3/23)

- 2002년 출범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일관계사 쟁점 분야에 대해 한일 양국 학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학설 및 역사인식에 대한 공통점을 도출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둬. 위원회 발족을 태동케 한 직접적인 발단은 후쇼사관 이른바 우익교과서 발간이었음.
- 역사, 특히 한일 관계사 부문에서 왜곡 혹은 논란이 적지 않은 기술을 다수 담은 후쇼사 교과서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 여론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정부는 무얼 했느냐”고 들끓었으며, 이런 움직임에 마침 기초학문이 고사 일보 직전에 처했다고 아우성치던 학계, 특히 역사학계가 가세하면서 마침내 위원회 발족까지 보게 됐다.



- 하지만, 위원회가 발족할 당시에도 그렇고, 나아가 그것이 발족한 이래 2002년 5월 이후 2005년 3월까지 활동한 제1기 위원회의 성과가 제출됐을 때도, 그 효능에 대한 의문의 눈초리는 다른 어느 곳보다 역사학계 내부에서조차 적지 않았음.
- 이들 회의론자는 무엇보다 “역사, 혹은 특정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만 해도 연구자 숫자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야만 학문 발전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한국의 시각이라 할 것이며, 무엇을 일본의 시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음.
- 23일 공개된 제2기 위원회 공동연구보고서 또한 “4개 분과로 나뉘어 양국이 합의한 24개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라 하지만, 실상 그 성과물이란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위원회에 참여한 한·일 양국 개별 역사연구자의 논문을 단순히 하나로 묶은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남.
- 나아가 설혹 위원회에 참여한 양국 연구자가 개별 역사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아무런 구속력을 지닐 수 없으며 다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측 외교통상부에서도 인정했음.
- 이 부문 한국측 학자로는 가야사 연구자인 홍익대 김태식 교수가 참여했음. 그는 전 7권으로 구성된 이번 공동연구성과 제1권에 수록된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임나 문제를 포함하여’라는 논문에서 일본서기에 보이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안라왜신관’(安羅倭臣館)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내에서도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음. 임나일본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학설이 국내에서만도 10인 10색이라 불러도 대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함.
- 일본의 식민지배가 핵심인 근현대사 분야에서는 국내에서조차 곳곳에서 논란이 극심해 대표성을 지니는 학설이 정립돼 있다고 하기도 힘든 실정임. 예컨대 ‘식민지 근대화론’만 해도 이번 위원회 우리측 연구자는 수탈이나 억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식민지시대 근대화 경험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주장 또한 국내에서도, 특히 경제사학계를 중심으로 아주 많음.
-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학자는 “역사를 보는 시각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한국과 일본의 ‘대표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라면서 “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공통된 하나의 역사인식을 도출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추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역사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日학자 “을사조약은 고종이 주도” 강변(3/23)

-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한·일 강제병합 조치의 전단계인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정면으로 의견대립을 보였던 것으로 23일 드러났음. 특히 일본측은 을사조약이 당시 고종



황제의 주도하에 진행됐다는 주장까지 퍼 올해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사를 직시하려는 양국 조야의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조광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림동 외 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측은 을사조약이 국가를 가산(家産)으로 간주하고 황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던 고종 황제에 의해 주도됐다고 강변했음.
-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현립 히로시마대 교수는 “고종황제는 국민과 일체가 돼 을사조약에 반대했다고 평가돼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고종 황제는 한국 황실의 이익 보증을 일본에 요구하며 (조약을) 교섭했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약반대운동을 선동했다”고 강변하고 “특히 905년 11월17일 어전회의에서 당시 대신들은 조약체결의 거부를 주장했으나 고종황제는 ‘협상타협’(교섭 타협)의 노선에 따라 협약안을 수정시켰고 그에 따라 2차 한일협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제의 한국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음.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일본 학자들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비로소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얻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을 버거운 상대였던 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일제의 조선 침략을 미화하는 방편”이라고 비판했음.
- 한·일 역사학자들은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용 및 강제공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식민지근대화론 등 근·현대사의 쟁점을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 각자의 주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병기했음.
- 특히 이석우 인하대 부교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법적지위가 언급되지 않은데 대해 “해당 영토에 대한 이해관계 국가들의 역사적 권리에 대한 고려보다는 전승국의 정무적인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고 지적했고,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준교수는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대해 “교섭과정을 보면 한국이 ‘하잘 것 없는 것’을 요구하고 일본이 안이하게 승낙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과 독도 영유권 문제, 군대위안부 문제 등은 민감한 현안들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음. 양측은 그러나 임나일본부설 등 과거사의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일치를 이끌어냈음.
- 한일 학자들은 지난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일부 일본 교과서 내용과 관련, 일본의 야마토 정권 세력이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했을 수 있지만 임나일본부라는 공식 본부를 설치해 지배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음.



로 하여금 그 행동을 비밀 정탐케 하는 등 야간경계는 종래의 감독자 외 간수 6명을 배치하던 것을 8명으로 증가하여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힘썼다”고 했음.

- 특히 “사형 확정 후에는 경계를 엄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야간간수를 증가시켜 감옥 안팎과 부속관사 부근 일원을 날이 샐 때까지 순찰시켰다”며 “야간에는 간수의 외출을 제한해 비상시에 대비하고 특히 일반 간수를 독려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했음. 이어 “다행히 본 사건이 종료되자 아무런 잘못이 없게 됐다”고 끝을 맺었음.
- 일제가 안 의사 수감 이후 경계를 대폭 강화한 것은 우리 동포에 의한 유해 탈취를 예방하려는 의도와 함께 유해의 고국 안장으로 향후 안 의사 묘지가 성지화돼 항일운동의 본령으로 역할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안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도 발견됐음. 이 기록은 일제가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지 한 달 열흘 만인 3월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한 것으로 명령 이틀 만에 사형이 집행됐음.
- 증거품 목록으로는 당시 러시아 측에서 발간했던 한자신문인 ‘원동보’ 한 부와 이토 암살을 암시한 ‘동청철도 기차 발착시간표’, 손가방 등이 적혀 있음. 사형 직후 안 의사의 동생들이 유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내용이 담긴 ‘두 동생의 유해 인도 요구에 대한 처리 경위 보고’ 원문도 확보됐음.
- 또 동생 안정근이 안 의사의 사진으로 5종의 엽서를 만들어 미국 하와이에 300매, 샌프란시스코에 500매를 보냈다는 기록도 사진과 함께 발견됐음. 특히 안 의사의 사진 아래에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을 붙여 만든 엽서도 있었음.
- 일본감옥협회가 1910년 1월20일 발행한 감옥협회잡지에 안 의사를 ‘보통의 형사피고인이지만 국사범과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음.
- 이와 함께 1906~1916년 기간에 뤼순감옥의 조선인 입감인원이 수록된 ‘일본감옥교회사’ 자료도 확보했음.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일본정부가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 허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성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했음.

라. 미·중 관계

● 中외교부장, 美겨냥 보호무역주의 경고(3/26)

-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26일 미국을 겨냥해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음. 양 외교부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관계는 매우 밀접해 어느 나라가 과거의 보호무역주의 관행을 따르거나 무역장벽을



세운다면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이번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 의회와 기업들로부터 오는 4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됨.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이와 유사한 중국 수출품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 22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IDB) 연례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환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우 인민은행장은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지나친 소음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책은 건전한 경제 분석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중국이 올해 점진적으로 위안화를 5%가량 절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환율 정책 기조변경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美·中 정치·무역 갈등 완화조짐 없다”(3/26)

- 중국 정부가 고위관료들을 미국에 보내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양국간 무역과 정치적 긴장이 완화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음.
-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을, 그리고 이틀 후인 24일 중산(鍾山)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상무부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와 경제 라인을 접촉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의회가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를 절하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경제전략을 지속적으로 펴왔고 그러면서도 이를 자발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중국 대표단의 미 행정부 설득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이런 가운데 중 부부장은 25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환율 변경으로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위안화를 절상하는 것은 좋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중국은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개혁하겠지만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음.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특별고문인 주민(朱民)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도 25일 “중국 정부는 환율 체제를 손질하겠지만 시간표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이에 팀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CNN 회견에서 “중국에



- (환율)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위안화가 절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중국에도 득이 된다”고 거듭 압박했음.
- 아울러 미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 뉴욕)와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중 부부장 일행의 방미 하루 전인 23일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맞서 중국제품에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제재법안을 5월 말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음.
 - 차이나데일리는 미 정부가 다음 달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양국간 무역·정치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음.
 - 특히 오는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5월 말에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가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양국이 무역·정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됨.

● <中, 美와 관계개선 시동>(3/25)

- 중국이 각종 민감한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음. 중국은 외교부와 상무부 등 핵심부처의 차관급 고위관료들을 잇따라 미국에 보내 ‘카운터파트’와 잇따라 회담을 갖게 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회의를 마치고 22일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갔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추이 부부장은 23일까지 이틀간 미국의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머스 도널런 부보좌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윌리엄 번스 국무부 정부담당 차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음.
- 미국 측 인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대중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양국 관계 발전과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대만 및 티베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요성을 중시한다”고 말했음.
-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양국 사이의 민감한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원하며 양국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추이 부부장은 “서로 간에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가늠하는 관건”이라면서 “중국은 양국 간 3개 공동성명의 기초하에 양국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음.
- 중국과 미국 관리들의 이 같은 발언은 양국 관계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됨. 중국은 중산(鍾山)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상무부 대표단을 24일 미국에 보내 중·미간 무역마찰과 위안화 환율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음.
- 중 부부장은 “환율 문제는 양국 무역불균형과 미국의 실업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속한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양국간 경제 무역 분야 마찰의 완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그는 양국간 경제 무역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보호무역주의와 경제무역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무역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음.
- 상무부 대표단은 26일까지 사흘간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국제무역위원회, 국무부, 재무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회담을 진행함.
- 일각에서는 중 부부장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이를 양국이 오는 5월말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탐색전을 벌이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양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는 만큼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말 전략경제대화 등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관계가 큰 틀에서는 통합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함. 양국의 관계 개선 의지는 최근 구글 사태를 둘러싼 태도에서도 쉽게 확인됨.
- 중국은 구글 사태와 관련, 본토에서의 철수를 결정한 구글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난공세를 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자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음.

● 美의원 “中환율 제재법안 5월까지 처리”(3/24)

- 미국 상원의원들이 중국의 통상무역협상 대표단 방문을 하루 앞둔 23일 대중국 위안화 절상압력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를 둘러싼 양국 갈등 심화될 전망이다. 찰스 슈머(민주, 뉴욕)와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상원의원 2명은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맞서 미국 기업보호를 위해 중국제품에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제재법안을 5월말까지 상원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슈머 의원은 전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강요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나의 믿음”이라며 “우리가 기다리는 날만큼 미국은 부(富)와 경제적 우위,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음. 특히 슈머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4월15일 재무부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와 관계없이 이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 그레이엄 의원은 “환율 문제가 없다면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



력을 더 갖게 될 것”이라면서 슈머 의원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공조했음.

- 슈머와 그레이엄 의원이 공동 제출한 환율조작 제재법안은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피해를 상쇄할 수 있게 미국 기업이 중국 제품에 관세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음. 이 법안은 또 1988년 도입한 기존의 법을 대체,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고 새로운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환율조작국에 대해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은 종산(鍾山) 상무부 부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이번 주 미국에 파견, 재무부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와 통상 문제 갈등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한편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중국 때문에 미국이 24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EPI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중국의 다른 관행도 이유가 되고 있지만 주요 원인은 중국의 환율조작 때문이라고 지목했음. EPI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지에 소재한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산업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없어졌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의 섬유, 가구 산업 등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 中 “구글사태 미·중관계 영향없다”(3/23)

- 중국 외교부는 구글 사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강조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본토에서 철수하겠다는 구글의 결정은 개별 기업의 행위”라면서 “이를 중·미 관계와 중국의 이미지 훼손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침소봉대이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음.
- 친 대변인은 또 “일부에서 기업의 개별적 행위를 정치화하면서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이미지가 훼손되는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구글 자신”이라고 말했음.
- 그는 “구글이 철수하든 남든 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남는다면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떠나려 하더라도 중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사후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 대변인은 이어 인터넷 검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국가안전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국가의 조치와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중국은 앞으로도 법에 근거해 인터넷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사태로 인터넷 검열 강도가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음.
- 그는 “개인적으로 구글을 사용해 봤고 다른 검색 엔진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서 “개별기업의 독립적인 행위를 중국은 결코 정치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구글은 해킹사건과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이유로 지난 1월 중국 시



장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중국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검색사업을 중국 본토에서는 철수하되 홍콩을 통해 ‘구글 차이나’ 검색 서비스를 계속하는 우회 전략을 사용키로 했음.

● 미·중 전략경제대화 5월말 베이징 개최(3/23)

- 중국 외교부는 오는 5월 하순 베이징에서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양국은 5월 하순 베이징에서 2차 대화를 개최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자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양국 국가원수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중국 측 대표로 나서며 미국 측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고 소개했음.
- 그는 “전략경제대화는 중·미 양국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대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무대”라면서 “양국은 양국 관계를 비롯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면서 전면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에 따라 기존의 전략대화와 전략경제대화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음.

● 中, 구글 ‘中본토 철수’ 맹비난(3/23)

- 미국 인터넷 검색엔진업체 구글이 22일 검색 서비스를 중국에서 철수하고 이를 홍콩에서 우회적으로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 정부와 언론, 누리꾼들의 비난이 잇따랐음.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3일 성명을 내고 “구글이 중국 내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킹 피해 책임을 중국에 돌린 행위는 중국 정부와 명문화한 약속을 깨는 일이자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음.
- 신문판공실 인터넷국의 책임자는 성명에서 “우리는 상업적인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구글의 근거 없는 중국에 대한 비난에 대해 불만과 함께 분개의 뜻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자는 “구글이 중국어 검색서비스를 중국 본토에서 퇴출시킨 것은 구글 자체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이후에도 중국의 법률과 국제적인 관례를 준수해 사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구글이 중국 시장에 들어올 때 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를 검열하기로 약속하고는 갑자기 약속을 깨려 한다면서 “이는 완전히 부당한 행위로, 변한 것은 중국의 투자 환경이 아니라 구글 자신”이라고 지적했음.
- 통신은 “중국 역시 인터넷 해킹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라면서 “중국 정부가 해킹을 용인했다는 주장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



스럽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2009년 현재 중국에는 외국 기업 66만개가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480개가 진출해 중국의 법률을 지키며 영업하고 있다”면서 “구글을 외자기업의 대표이자 전형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 통신은 일각에서 제기된 투자환경 악화 가능성에 대해 “개혁개방의 길을 추구하는 중국은 앞으로도 외자기업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홈페이지에는 구글의 검색서비스 철수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이 구글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에서 구글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관영 언론매체와 웹사이트들을 결집,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갈등을 구글 문제와 한데 묶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구글 검색서비스의 중국 본토 철수 소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이크 해머 대변인은 “구글과 중국 정부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실망했다”면서 “구글의 결정은 자신들에게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근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중 관계는 서로 차이를 인정할 만큼 성숙했다“면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사안에 관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글은 해킹사건과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이유로 지난 1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중국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검색사업을 중국 본토에서는 철수하되 홍콩을 통해 ‘구글 차이나’ 검색 서비스를 계속하는 우회 전략을 사용키로 했다.

● 원자바오 “美와 문제 풀고 싶다”(3/23)

- 중국 총리와 인민은행 총재가 미국의 위안 환율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거듭 표명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잇따라 촉구해 주목됨.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1~22일 중국개발포럼(CDF)에 참석한 외국 기업인 0명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오는 5월 개최될 미국과의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에서 문제를 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현지매체들이 23일 보도했음.
- 그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 보건대 중·미 양국은 갈등과 차이를 하나씩 해결해왔고 (그런 결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가까워져 왔다”면서 “이번 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양국에 모두 매우 중요하며 갈등과 문제를 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지난해 7월 워싱턴에서 첫 개최됐으며 이번에는 5월중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예정임. 원 총리는 그러면서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환영하며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화해 제스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원 총리는 이어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요인을 보면 회복이 부드럽지는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면서 일부 국가의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을 언급했음.

- 그는 대화과정에서 모건 스탠리 아시아의 스티븐 로우치 회장이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자 “무역과 환율 전쟁을 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에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모든 나라와 기업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원 총리는 특히 포드의 앨런 물랄리, 리오 틴토의 토머스 알바니스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미·중 간에 “환율 및 무역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음.
- 그는 그러나 미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음. 원 총리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무역흑자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틀린 얘기”라면서 “3월에 중국의 무역적자가 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음. 중국이 월별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는 2004년 4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이 맹목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아왔다”면서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장기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 그는 자국 경제와 관련,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긴급하게 추진해갈 것”이라면서 “수출에서 내수로 경제구조를 바꾸고 도시와 농촌의 갭을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음.
- 지난 21~22일 비공개로 열린 중국개발포럼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음. 한편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22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IDB) 연례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환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음. 저우는 위안 환율을 둘러싼 “지나친 소음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책은 건전한 경제 분석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마. 미·일 관계

● 美 “후텐마 이전 日 제안 신중히 검토”(3/27)

- 존 루스 주일 미 대사는 26일 도쿄 시내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오키나와(沖縄)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현재 생각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루스 대사는 이날 회담에서 오키나와 외상에게 “(일본 정부가 요구하



는 대로 옮기면 주일미군의) 역지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다 외상은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한 뒤 “정치, 운용 면에서도 역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오카다 외상은 오키나와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주일 미 해병대 후텐마 비행장을 일단 나고(名護)시 캠프슈워브 육상부로 옮겼다가 우루마시 미군 화이트비치 앞바다 인공섬으로 다시 옮기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동안 2006년 미·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캠프슈워브 연안부 이전안을 부정하고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오키나와 내 2단계 이전안을 전달한 것임. 미·일 양국은 조만간 실무자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 오카다 외상은 28일부터 미국, 캐나다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과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이전안을 설명할 계획임.
-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싶다”고 표명했지만 훈련의 일부를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노시마(徳之島) 등으로 옮기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언론매체들은 점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이날 오키나와현 지사와 회담하고 기존 계획인 캠프 슈워브 연안부 매립은 실행 불가능해졌다고 오키나와 내 2단계 이전안과 함께 훈련을 현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외 이전을 요구하는 오키나와 주민과 연립여당인 사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5월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日 “후텐마 기능 50% 오키나와 밖 이전”(3/25)

-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을 같은 오키나와(沖縄)현으로 이전하되 기능 50% 이상은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에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현내 캠프슈워브 육상부나 화이트비치 연안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제시해 택일토록 하기로 했음.
- 하지만 고정 날개를 가진 항공기나 미군이 가까운 시일내 배치할 신형수송기 등 긴 활주로가 필요한 항공기는 가고시마(鹿兒島)현의 도쿠노시마(徳之島), 나가사키(長崎)현의 해상자위대 오무라(大村)항공기지 등 2천m급 활주로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등 후텐마 기능의 50% 이상을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기로 했음.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25일중 존 루스 주일 미국 대사에게 이런 방침을 전달하기로 했음. 오카다 외상은 또 캐나다에서



오는 29일 열리는 G8 외무장관 회담을 전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 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에게도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했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정부가 정리한 후텐마 이전안과 관련해 관계 각료들에게 “오키나와의 부담이 50% 이상 줄어 주민들도 이를 실감할 수 있는 안으로, 미국으로부터도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음.

- 캠프슈워브 육상부의 경우 500m짜리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고 화이트비치는 연안부를 매립해 활주로를 건설할 방침임. 하지만 미국은 기존 합의안인 캠프슈워브 연안부 이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제시한 안에 동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함.
- 오키나와 주민들도 후텐마의 모든 시설을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 日, 후텐마 이전 정부안 막판 조정(3/23)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23일 밤 총리 공관으로 주요 각료들을 불러 들여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지를 두고 정부안 막판 조정 작업을 벌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음. 일본 정부는 이날 모임에서 오키나와 우루마시 미군 화이트 비치 앞바다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방안과 미군 캠프 슈워브 육상부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두 가지 안을 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훈련 장소 일부를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노시마(徳之島)에 옮기는 방안도 논의했음.
- 하토야마 총리는 모임 전에 기자단에게 “기본적으로는 아직 의견 조정 단계”라며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설명, 정부안을 결정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일본 정부는 조만간 연립여당 당수 급이 참석하는 기본 정책각료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정식 결정하고,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나 미국과 교섭에 들어갈 방침임.
- 하지만 미국 측은 2006년 미·일 양국이 합의한 대로 캠프 슈워브 연안부로의 이전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 이날 모임에는 하토야마 총리 외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오키나와 담당상,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이 참석했음.
- 한편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유사시에 후텐마 비행장이 없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점을 포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 유사시에는 후텐마 비행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보였음.



- 에서 그렇게 해 왔음.
- 2001년 6월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첫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당시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부시 전 대통령은 “푸틴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 사람이다. 그의 눈에서 영혼을 읽었다”고 극찬했음.
 - 그리고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러시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군사 작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진출을, 미국은 러시아의 체첸 무력진압을 서로 눈감아 주기도 했음. 하지만, 부시 정권 말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을 보였음.
 -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분명히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자유, 부패 문제 등에서 푸틴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는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의 ‘안보 독트린’을 보면 유럽 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메드베데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푸틴과 권력을 나눠 갖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음. 메드베데프가 핵무기 감축이나 이란 문제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언급을 해도 지난주 클린턴 방문에서처럼 푸틴 총리에 의해 그 빛이 종종 가려지고 있음.
 - 결론적으로 두 정상 간 개인적 친분이 관계 재설정엔 일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국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득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임.
 - FP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 양국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고민하는 부시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음.

사. 중·러 관계

● 푸틴 “중국의 양안 정책 지지”(3/23)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23일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 정부의 양안 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음. 푸틴 총리는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파트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음. 푸틴 총리는 “러시아는 양안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대해 중국을 계속 지지해 왔다”면서 “러시아는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시 부주석은 “중국은 세계 질서의 한 축을 맡은, 민주적이면서 강한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화답했음. 그는 또 “중국은 러시아가 국제 및 지역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강대국(러시아)의 지위에 맞는 것”이라면서 “중·러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과정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고려돼야 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 양국 관계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 부주석은 20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세르게이 다르킨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주(연해주) 주지사와 만나 경제 및 교류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총 16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음.
- 21일에는 극동국립대학교 공자대학과 2012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건설 중인 블라디보스토크 금각만 교량 건설현장 등을 둘러봤음. 시 부주석은 24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면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어의 해’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임.

아. 기타

● 中 “천안함 침몰 남북화해 영향없어야”(3/28)

- 중국 당국은 한국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사건과 관련, 28일 현재 아무런 공식 논평을 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은 군사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이 한반도 긴장완화 추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음.
- 신화통신, 인민일보, 관영 CCTV 등 중국 언론매체들은 이번 사건 직후 속보를 내보내는 등 신속하게 보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도 주목했음.
- 중국 군사전문가 양용춘(梁永春)은 27일 중국라디오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는 긴장완화 추세로 나가고 있으며 6자회담도 연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이 이런 긴장완화 추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그는 “따라서 지금은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고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시점에 발생한 돌발사건에 대해 남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용춘은 한국 초계함이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사건 발생 직후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초계함 후미에서 발생한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공격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의문점도 많다”고 분석했음.
- 그는 “천안함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포항(浦港)급 경형 초계함”이라며 “만일 자체 원인으로 폭발이 발생했다면 적재하고 있던 폭탄이 폭발했던가 아니면 터빈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양용춘은 “또 선체에 구멍이 뚫린 점을 들어 어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체 폭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승조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 당국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전 충돌이 벌어졌을 때 즉각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대조된다”면서 “따라서 외부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한편 중국 언론은 사건이 발생한 26일밤 부터 연합뉴스를 인용, 신속하게 보도한 후 상황 진전을 시시각각 구체적으로 내보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음.
- 일부 언론은 한국 언론매체들을 인용, 북한에 의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제목으로 올리기도 했으나 대부분 청와대와 국방부 발표 등을 토대로 차분하게 사실 보도에 초점을 맞췄음. 언론 매체들은 ‘청와대 수차례 안보장관 회의’ ‘한국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 ‘실종자 수색에 진전 없어’ ‘북한과 무관하다’ 등의 제목 아래 이번 사건의 흐름을 짚어나가고 있음.

●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3/26)

-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5일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음.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이날 UNHRC 47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음.
- 이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5개국이었으며 13개국은 기권했음. 지난해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결과와 비교하면 찬성은 2표가 늘었고 반대는 1표가 줄었음. 작년까지 기권했던 비동맹권이었던 브라질과 지부티가 올해 찬성표로 돌아섰고, 반대표를 던졌던 나이지리아가 기권을 행사했기 때문임.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12월 북한인권 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를 열어 167개의 대북권고안을 채택한데 대해 북한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음.
-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정치범과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노동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결의안은 또 북한이 지난 2004년 유엔 결의안을 통해 임명된 비릿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6년 동안 일절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음.
- 오는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달 초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인권을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라고 묘사하면서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북한 정권이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 ‘거대한 감옥으로서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결의안에 대해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나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틀에 박힌 결의안 초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최 참사는 또 “미국과 일본, EU는 북한을 제기하기 위해 인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의 이슬람 사원 첨탑(Minaret) 추가 건설 금지 등을 비롯한 반이슬람 행동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찬성 20표, 반대 17표의 근소한 차이로 채택했음.

● 中훈춘, 러' 자루비노-日쓰루가 항로 추진(3/25)

- 북한의 라진항을 확보하면서 동해 진출의 길이 열린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가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거쳐 일본 쓰루가를 연결하는 항로 개척도 추진 중임.
- 동해와 근접한 두만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북한에 막혀 바다로 나갈 수 없었던 지리적 한계를 북·러 양국의 항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극북, 해상 진출 루트를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 길림신문(吉林新聞)은 25일 지양후취안(姜虎權) 시장을 비롯한 훈춘시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후쿠이현 쓰루가시 관계자들과 항운 전문가들을 만나 훈춘-자루비노-쓰루가 항로 개척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지양 훈춘시장의 말을 인용, “중·러·일 3국이 이 항로 개척에 합의, 설비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이 항로가 열리면 중국 북방과 일본 서해안이 해상루트로 연결돼 교역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중국은 이 항로가 연내 개통될 것으로 보고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 일본 등을 오가는 환동해 유람선 관광도 추진 중임.
- 창지투 개방 선도구의 대외 창구인 훈춘은 이에 앞서 북한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동해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음. 중국은 오는 7월부터 라진항을 이용하기로 북한과 합의했음.

● ‘안중근 유해발굴’ 한·중·일 회담서 논의 추진(3/24)

- 정부는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안의사 유해발굴 사업을 오는 5월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순조로운 논의가 이뤄질 경우 5월말 제주도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 주목됨.
-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그동안 일본, 중국을 상대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따라서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올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또 다른 당국자는 “안 의사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국, 일본 측에 항상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부는 이에 따라 안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3국간 협력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으로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3국 외교장관회담 의제화 여부를 본격 협의할 방침임.
-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안 의사의 유해발굴 사업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국 및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또 관계부처와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을 참여시켜 안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합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했음. 보훈처 관계자는 “유해를 고국에 묻어 달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받들고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합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합동유해발굴단에는 보훈처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역사학자, 독립기념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합동유해발굴단은 연내에 안 의사 유해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뤼순(旅順)감옥 일대에서 재발굴 작업을 펼치는 한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소장한 안 의사 관련자료 발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지난 2006년 6월 남북이 공동 유해조사단을 중국 대련에 파견해 뤼순감옥 북서쪽 야산을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정하고 2008년 3~4월 남측 단독으로 29일간 발굴작업을 벌였으나 동물 똥조각만 발견됐을 뿐 망국의 한을 품은 안 의사의 유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김 양 보훈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뤼순감옥 주변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부터는 일본이 소장한 자료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기록문화를 가진 일본의 특성을 미뤄보면 더욱 그러하며, 우리는 일본 측이 (안 의사 유해와 관련한) 결정적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음.

● 한·러 수교 20주년 다채로운 기념행사(3/22)

- 한국과 러시아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 교류 행사가 내달 초부터 러시아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짐. 내달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 한해 20여 개에 이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식 또는 비공식 문화 행사가 모스크바를 비롯해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임.
- 수교 20주년 행사는 지난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에 의해 ‘한국의 해’와 ‘러시아의 해’로 각각 지정해 기념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3월 양국 문화장관이 정부 간 문화 교류 계획서에 서명하면서 구체화됐음.